

미국 대전략 전환과 한국 외교의 선택 :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

박 용 수*

•요 약•

본 연구는 미국 대전략의 전환이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 구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한국 외교 전략을 설계·관리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전략을 단일 노선의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의 과정으로 재정의 하며, 경제안보의 중심화와 부담 분담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통해 동맹을 자동적 군사 보증에서 기능별 정렬과 차등적 기여에 기반한 계약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외교에 ‘동맹 심화 vs. 헤징 강화’라는 선형적 전략 논리를 넘어, 동맹과 헤징을 어떠한 원리로 조정·결합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어떠한 조건과 범위에서 형성·관리할 것인가라는 복합적 설계 과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동맹, 헤징, 전략적 자율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맹이 다 영역 전략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들 요소가 동일한 제약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함께 조정·결합되며 전략적 자율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통합적 분석틀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은 여전히 특정 전략의 강화나 완화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해석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을 통해 동맹과 헤징을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전략이 아니라 한국 외교가 정책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상호 연동된 조정 요소로 재개념화한다. 또한 전략적 자율성을 이들 간 결합과 조정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시간에 따라 누적·축적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합 균형 모형은 전략을 병렬적으로 선택하는 틀이 아니라, 변화하는 제약 조건에 대응해 전략 요소 간 조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미국 대전략 전환이 한국 외교 전략을 단일한 노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과 관리의 문제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증거를 제시한다.

주제어 : 미국 대전략, 한미동맹, 헤징 전략, 헤징-동맹 조정, 전략적 자율성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I. 서론

현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 전쟁의 상시화, 그리고 경제·기술 안보의 정치화가 중첩되면서 전후 질서가 전제해 온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대만해협 긴장의 상시화는 전통적 안보 제도와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규범적 효력 약화를 드러내는 한편, 팬데믹 이후 반복된 공급망 교란과 기술 경쟁의 격화는 개방성과 상호의존을 안정의 기반으로 전제해 온 자유주의 질서의 핵심 가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개별 위기의 누적이 아니라, 전후 질서를 지탱해 온 전략적 전제들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전환의 징후라는 데 있다.

이러한 질서 변동의 중심에는 미국 대전략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 이후 전진 배치와 동맹 확장을 통해 전면적 관여를 지속해 온 미국은 재정 제약, 국내 정치의 분극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압력이 결합되는 조건 속에서 선택적 관여와 부담 분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2025년 12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2025년 NSS)』에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025년 NSS는 전략을 단일 노선의 선택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과 제약 속에서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선택과 우선순위의 조정 과정으로 규정하며, “전략은 평가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¹⁾ 이는 전후 미국 대전략의 기본 전제였던 모든 지역·이슈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이 더 이상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전략이 ‘무엇을 할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포함하는 자기규율임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2025년 NSS는 국가안보의 범주를 군사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 기반, 기술 경쟁력, 공급망 복원력이라는 경제안보의 층위로 확장한다. 문서는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에 핵심이다”라고 명시하며²⁾, 무역·산업정책, 기술 통제와 수출통제, 표준 경쟁을 대전략의 주변 수단이 아니라 중심적 전략 도구로 재배치한다. 그 결과 동맹은 군사적 억제를 넘어 기술·산업·표준 정렬을 포괄하는 다영역 전략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동맹 관리의 비용은 방위비 분담을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정책 전반을 조율해야 하는 정책 부담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오랫동안 활용해 온 ‘안보는 동맹, 경제는 분리 관리’라는 기능적 분업형 헤징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1)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1.

2)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13.

아울러 2025년 NSS는 미국의 역할 인식에 대한 자기규율적 전환을 분명히 한다. 문서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³⁾, 무제한적 헌신에 기초한 질서 유지에서 선택적 책무와 효율성에 기반한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시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각자의 지역에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은 그 네트워크의 ‘소집자(convener)’이자 ‘지원자(supporter)’로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⁴⁾ 더 나아가 안보 책임의 확대와 기술·수출통제 정책의 대미 정렬을 이행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업적 우대, 기술 공유, 방산 협력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⁵⁾, 동맹을 규범적 가치 연대가 아닌 기능적 계약 관계로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2025년 NSS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운용을 전면적 관여에서 지역별 전략 우선순위에 기초한 선택적 집중으로 재구성하며, 전략적 자산과 정책적 관심을 특정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문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외부 우선순위로 명시하면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에 대한 현대적이면서도 공세적인 재해석, 이른바 ‘먼로주의에 대한 트럼프 코롤라리(The 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를 통해 서반구에서의 미국 우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서는 미국이 서반구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회복하고, 미국 본토의 안전과 역내 핵심 전략 지리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명시하며, 이를 위해 마약, 불법 이주,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을 억제하고 핵심 전략 공간에 대한 접근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다.⁶⁾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관여와 전략적 집중은 곧바로 미국 패권의 후퇴나 전략적 공백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서반구 우선주의가 가시화된 전략적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전략과 동맹 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여전히 핵심 과제로 병행하고 있어, 이를 단순한 지역적 철수나 전면적 관여 축소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의 강압적·물리적인 수단의 동원이 동맹 네트워크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확산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맹국이 직면하는 도전은 미국의 개입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공

3)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12.

4)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12.

5)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12.

6)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15-16.

백의 관리라기보다는, 공세적 개입이 초래하는 정치적 동조 압박, 제재 및 통제 참여에 대한 압력, 방위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기능적 기여 수준 상향이라는 복합적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 압력 속에서 형성되고 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율성이 미국의 전략적 공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공세적 개입과 동맹 압박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할 전략적 변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한국 외교에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전략 선택 구조 자체의 재편으로 작용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접점에 위치한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비대칭적 이중구조를 장기간 유지해 온 중견국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기술·산업·공급망·규범 전반의 정렬을 내장한 전략 플랫폼으로 재구성되고, 중국 역시 경제적 상호의존을 외교·안보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기존의 기능적 분업 인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공급망 재편 참여, 첨단기술 통제와 표준 경쟁은 이제 개별 경제정책의 범주를 넘어 동맹 관리와 대중국 관계를 동시에 규정하는 핵심 전략 변수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만해협 긴장의 상시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제한적 안보 기여 요구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보복 가능성, 공급망 단절 위험, 확산 위험의 전이가 결합된 복합적 비용 구조에 직면하게 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동맹 연구는 주로 군사적 억제와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설명해 왔고⁷⁾, 헤징 연구는 중견국이 단일 진영 선택을 회피하며 관계를 분산 관리하는 전략을 설득력 있게 분석해 왔으며⁸⁾, 전략적 자율성 논의 역시 동맹 제약 속에서 선택 공간

7) 정향석. 2013.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평화연구』, 제21권 제2호; 나승학. 2015.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제3호; 조비연. 2024. “한미동맹의 변화와 발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5권 제2호; 마상윤. 2022.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115-152; 김우상. 2023.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신아세아』, 제30권 제2호; 박인휘. 2023. “신국제질서의 등장과 한국 외교: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30권 제4호; 유상범. 2023.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과 한미동맹에의 함의”, 『국제정치연구』, 제26권 제3호.

8) Ikenberry, G. John. 2016.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31, no.1; Jones, David Martin and Nicole Jenne. 2021. “Hedging and Grand Strategy in Southeast A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2, no.2; Tan, Wayne and Jenn-Jaw Soong. 202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ia and Its Strategic Choice under U.S.-China Power Rivalry and Hegemonic Competition: A Defensive Hedging Policy”, *The Chinese Economy*, Vol.56, no.4; Wilkins, Thomas. 2023. “Middle Power Hedging in the Era of Security/Economic Disconnec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3, no.1; Lee, Terence. 2024.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Hedging in

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전개되어 왔다.⁹⁾ 그러나 동맹이 다영역 전략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 세 요소가 동일한 제약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결합·조정되며, 그 결과 전략적 자율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산출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분석틀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대전략 전환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25년 NSS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관련 전략 문서 검토를 통해 미국의 동맹, 경제 안보, 부담 분담에 관한 제도적 자기인식을 추출하고, 이를 기존 동맹·헤징·전략적 자율성 이론과 대조함으로써 통합 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복합 균형 모형은 동맹과 헤징을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정책적으로 조정·관리 가능한 전략 변수로 설정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이들 간 결합과 조정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시간에 따라 축적되며 산출되는 과정적 성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2025년 NSS가 규정하는 동맹 재편은 한국 외교의 선택 비용을 어떠한 경로로 증첩·증폭시키는가? 둘째, 동맹의 다영역 정렬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헤징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 범위’가 재규정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조정 비용이 발생하는가? 셋째, 이러한 조정의 누적은 전략적 자율성을 어떠한 조건에서 확대 또는 제약하며, 그 결과는 선택공간, 조정능력, 정책여지라는 하위 요소들에 어떻게 분화되어 나타나는가? 요컨대 본 연구는 미국 대전략 전환으로 동맹의 기능이 군사 영역을 넘어 다영역 전략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선택 비용과 제약이 어떻게 재배열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외교를 단일 전략의 택일이 아닌 전략 간 조정의 축적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이 형성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준거를 제공한다.

Singapore’s Foreign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46, no.1; Marston, Hunter S. 2024. “Navigating Great Power Competition: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Strategic Rival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4, no.1; 장희경. 2023. “미·중 경쟁 시대 독일의 지정학적 헤징 전략: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 『국제관계연구』, 제28권 제2호; 김소연. 2024. “비동맹국가 헤징전략의 지속가능성 탐색: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2집 제2호.

9) 반길주. 2021. “회피-수용-주도 진화전략: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도전과제와 중견국 맞춤형 외교안보전략”,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이성현. 2024.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외교: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 『계간 외교』, 제10권 제151호; 류인석. 2024.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이중역제 역할”, 『국방연구』, 제67권 제4호; 박기태. 202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국가전략』, 제31권 제3호; 이재승. 2025.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8권 제3호.

II. 이론적 논의: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과 작동 논리

기존 균형-편승 이분법과 군사 억제 중심의 동맹 분석은 국가의 전략 선택을 단일 노선의 채택 문제로 단순화해 왔다. 그러나 미국 대전략 전환이 전면화되는 국면에서 전략은 제약된 자원과 다영역 경쟁 속에서 우선순위와 조정 원리를 설계·관리하는 문제로 재구성되며, 2025년 NSS가 보여주듯 동맹 또한 자동적 군사 보증을 넘어 경제·기술·산업·공급망·규범 정렬을 포함하는 기능별 조정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중견국 외교의 선택 비용은 영역 간 중첩을 통해 증폭되며, 이에 따라 핵심 과제는 동맹 강화와 헤징의 단순한 택일이 아니라 동맹의 다영역적 정렬 하에서 헤징의 운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고, 그 결합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어떠한 경로로 형성·축적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본 장은 동맹과 헤징을 동일한 제약 아래에서 조정·결합되는 전략 변수로 재정의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그 조정의 축적에서 산출되는 과정적 성과로 개념화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1. 동맹의 이론적 논점과 제약 메커니즘

동맹은 외부 위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정렬을 요구함으로써, 중견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공간의 상한선을 구조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한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협력 제도 가운데 하나인 동맹은 권력 분포와 위협 인식,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왔다. 전통적 현실주의는 동맹을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선택으로 이해하며, 자력 강화와 외부 결속 간의 비용-효용 계산을 통해 그 형성 논리를 설명한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동맹은 국가 생존을 위한 기능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구조적 현실주의의 설명은 위협 인식의 구성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확장되었다. 이 같은 접근에 따르면 위협은 단순한 물질적 역량이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 공격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인식이 결합되어 형성되며, 국가는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된 행위자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선택한다.¹¹⁾ 이를 통해 동맹은 자동적 결속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건부 제도로 이해되었고, 동맹의 지속성 역시 구조적 안정이 아니라

10)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1)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전략적 적합성의 함수로 재해석되었다.

그러나 동맹은 형성보다 유지의 과정에서 더욱 복합적인 딜레마를 내포한다. 결속이 강화될수록 동맹국의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증가하고, 결속이 약화될 경우 방기의 위험이 확대되는 연루-방기 딜레마는 동맹 관계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긴장으로 작동해 왔다.¹²⁾ 특히 강대국-중소국 간 비대칭 동맹에서는 안보 제공과 전략적 자율성의 교환 구조가 반복되며, 동맹은 안정의 원천이자 동시에 전략적 선택 공간을 제약하는 제도적 틀로 기능한다.

자유주의적 접근은 동맹을 반복적 상호작용과 제도화를 통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촉진하는 협력의 구조로 파악한다.¹³⁾ 이 관점에서 동맹은 정보 공유와 비용 분담, 정책 조정을 통해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장기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협력 역시 부담 분담과 역할 조정이라는 갈등을 내포하며, 동맹이 수반하는 비용과 전략적 제약을 자동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구성주의는 동맹을 물질적 위협이나 제도적 장치의 산물로만 보지 않고, 공유된 정체성과 상호 인식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로 이해한다.¹⁴⁾ 이와 같은 접근은 동맹이 이익 계산을 넘어 의미와 정당성의 부여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연루와 방기, 안정과 자율성 사이의 선택은 여전히 전략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⁵⁾

결국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는 설명 경로는 다르지만, 동맹이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견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을 제약한다는 점에서는 수렴한다. 다만 이들 접근만으로는 동맹이 군사적 억제를 넘어 경제·기술·산업·공급망·규범까지 포섭하는 다영역 정책 조정 장치로 진화한 최근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동맹은 더 이상 체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어느 수준의 정렬을 감내하고 그 대가로 어떠한 보호와 접근권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기능적 설계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은 헤징의 운용과 불가피하게 교차하며, 동맹과 헤징 간 조정의 누적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이 어떠한 조건과 경로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가 중견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12)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

13)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Zehfuss, Maja. 2002.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s of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헤징의 이론적 성격과 옵션·비용 구조

헤징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책 선택지를 보존하려는 전략이지만, 동시에 동맹 신뢰와 정책 정렬의 일관성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헤징이란 강대국 경쟁이 구조화된 국제환경에서 중견국이 단일한 정책 정렬에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고, 군사·경제·기술·산업·공급망 등 다영역에 걸친 정책 공간에서 관계를 기능적으로 분리·조합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 전략 선택지를 관리하려는 조건부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옵션 관리 전략은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동맹의 신뢰 평가에 대한 부담을 동반하며, 특히 핵심 안보 사안에서의 반복적 모호성은 선택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신뢰 비용의 누적으로 전환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헤징은 진영 선택을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다영역 경쟁 환경에서 정렬의 강도와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관리하려는 능동적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헤징 개념은 금융경제학의 위험 분산 논리에서 출발하여, 냉전 종식 이후 강대국 경쟁이 재부상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전이되었다. 미·중 경쟁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보여준 외교 행태는 균형·편승의 이분법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 대안적 분석 범주로 헤징이 제시되었다.¹⁶⁾ 초기 연구들이 헤징을 전략적 모호성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이해한 데 비해¹⁷⁾, 이후 연구들은 이를 연루와 방기라는 상반된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능동적 조정 전략으로 재정의하였다.¹⁸⁾

최근 논의는 헤징을 보다 명시적이고 목적론적인 전략 범주로 정교화하고 있다. Tan과 Soong은 헤징을 구조적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보험적 전략’으로 규정하며, 이를 균형과 편승의 중간항이 아닌 고유한 전략 선택으로 위치시킨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헤징은 단기적 안정 확보보다는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옵션 가치를 축적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16) Goh, Evelyn. 2005. *Great Powers and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Omnibus or Flexible Engagement?* London: Palgrave Macmillan; Roy, Denny.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7, no.2; Kuik, Cheng-Chwee. 2008. “The Essence of Hedg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30, no.2; Kuik, Cheng-Chwee. 2016. “How Do Weaker States Hedge? Unpacking ASEAN States’ Alignment Behavior toward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25, no.100.

17) Goh, Evelyn. 2006.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August 31.

18) Ciorciari, John D. 2010. *The Limits of Alignment: Southeast Asia and the Great Powers since 1975*,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 Tan, Wayne and Jenn-Jaw Soong. 202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ia and Its Strategic Choice under U.S.-China Power Rivalry and Hegemonic Competition: A Defensive Hedging Policy”, *The Chinese Economy*, Vol.56, no.4.

이와 함께 헤징 연구는 두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나는 헤징을 동남아에 국한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첩되는 국제질서 전반에서 중견국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일반적 전략 유형으로 파악하는 접근이다.²⁰⁾ 다른 하나는 헤징을 단일한 외교 노선이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영역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강도로 결합되는 전략적 조합의 동태적 설계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미국 대전략 전환이 전제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 외교의 헤징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맹과 결합·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때 헤징은 전략적 자율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중견국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핵심적 전략 입력 변수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헤징은 동맹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전략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정렬의 강도와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연루와 종속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 전략 선택지를 보존하기 위한 조정 전략이다.

3.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과 중견국 외교의 조건

전략적 자율성은 흔히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이나 독자 노선의 선언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개념을 과도하게 협소화한다. 본 연구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특정 외교 노선의 선택 여부가 아니라,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국가가 주요 전략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택 범위와 정책 조정 여지를 확보·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이고 과정적인 속성으로 정의된다. 즉 전략적 자율성은 의지나 담론이 아니라, 정책 조정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적 개념이다.

20) Ikenberry, G. John. 2016.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31, no.1; Jones, David Martin and Nicole Jenne. 2021. "Hedging and Grand Strategy in Southeast A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2, no.2; Tan, Wayne and Jenn-Jaw Soong. 202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ia and Its Strategic Choice under U.S.-China Power Rivalry and Hegemonic Competition: A Defensive Hedging Policy", *The Chinese Economy*, Vol.56, no.4; Wilkins, Thomas. 2023. "Middle Power Hedging in the Era of Security/Economic Disconnec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3, no.1; Lee, Terence. 2024.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Hedging in Singapore's Foreign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46, no.1; Marston, Hunter S. 2024. "Navigating Great Power Competition: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Strategic Rival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4, no.1; 장희경. 2023. "미·중 경쟁 시대 독일의 지정학적 헤징 전략: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 『국제관계연구』, 제28권 제2호; 김소연. 2024. "비동맹국가 헤징전략의 지속가능성 탐색: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2집 제2호.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동맹은 중견국에게 자율성의 자동적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외부 위협에 대한 안정성과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전략적 선택 공간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동맹 정렬의 범위와 강도가 누적되고 경직될수록 정책 조정의 여지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율성의 핵심은 동맹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정렬 수준이 조정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가에 있다.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중견국 외교에서 핵심적인 이유는, 중견국이 강대국처럼 질서를 설계할 역량도, 소국처럼 전면적 보호에 의존할 여지도 갖지 못한 중간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면적 균형이나 일방적 편승은 선택 비용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중견국은 관계의 기능적 분리와 영역별 차등 조정을 통해 전략적 선택 공간을 관리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 자율성은 특정 전략의 채택으로 즉각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이러한 조정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범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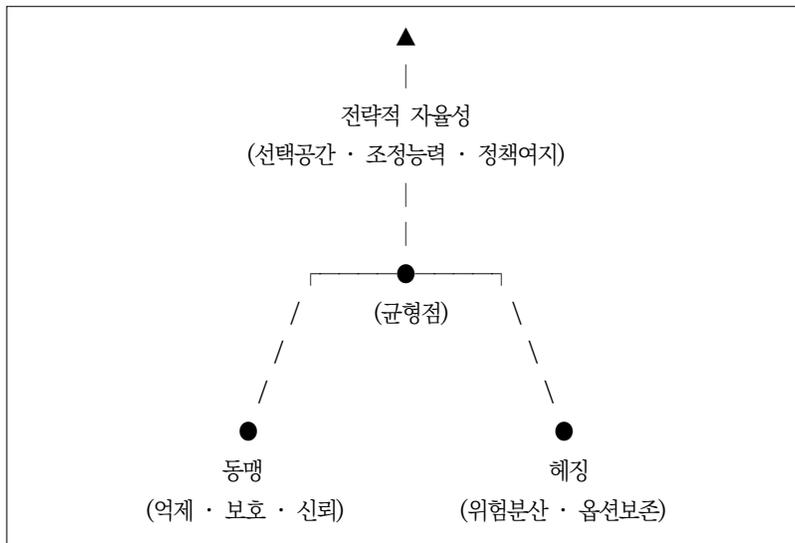
중요한 점은 전략적 자율성이 헤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헤징이 불확실성과 경쟁의 변동성에 대응해 위험을 분산하고 옵션을 관리하는 전략적 행위 양식이라면, 전략적 자율성은 그러한 행위가 동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결합·조정되었는지를 통해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결과적 속성이다. 헤징은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자율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전략적 자율성은 의지나 관계 다변화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방위·경제·기술 기반과 정책 조정 역량이라는 물질적·제도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외교 다변화는 오히려 의존 구조를 은폐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자율성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기적 안정 추구가 장기적 조정 능력의 축적을 잠식할 경우, 당장의 위기 관리는 가능하더라도 중장기적 전략 선택 공간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종합하면 전략적 자율성은 고정된 상태나 독립적 목표가 아니라, 동맹과 헤징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강도로 결합되며 그 조정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되는가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과정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중견국 외교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과 헤징의 결합 양식에서 도출되는 조정의 성과로서, 전략적 선택 공간을 평가하는 핵심 분석 축으로 자리매김한다.

4. 복합 균형 모형: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산출 메커니즘

본 절은 동맹의 조정 방식과 헤징의 운용 범위가 결합되는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여, 전략적 자율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산출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견국 외교에서 상이한 외교 기능들이 동일한 구조적 제약 환경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동맹과 헤징을 상호 배타적 선택지가 아니라, 정책 영역과 기능에 따라 조정 강도를 달리하며 병행적으로 작동하는 전략적 변수로 설정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이들 변수의 결합과 조정이 시간에 따라 축적되며 산출되는 과정적 결과로 개념화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 동맹-헤징 조정과 전략적 자율성 산출

복합 균형 모형의 핵심 전제는 중견국 외교가 단일 축 위에서 이동하는 선형적 선택이 아니라, 다차원적 제약 환경 속에서 복수의 전략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며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 모형에서 동맹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와 보호를 제공하는 안정화 장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정책 정렬 요구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의 상한선을 구조적으로 규정한다. 반면 헤징은 불확실성과 경쟁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분산과 옵션 보존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그 운용 방식에 따라 동맹 신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수반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동맹의

조정 방식과 해징의 운용 범위가 정책 영역별로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산출되는 조정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고정된 균형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과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균형점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적 균형으로 파악된다. 동맹의 심화는 단기적으로 안보 안정성과 억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정책 정렬의 경직성과 경로 의존성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성의 형성 여지를 제약할 수 있다. 반대로 해징의 운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유연성과 선택 공간은 확장될 수 있으나, 그 강도가 과도해질 경우 동맹 신뢰 비용과 압력의 증폭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진다. 전략적 자율성은 이러한 상충 효과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한적으로 형성되며, 어느 한 요소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복합 균형 구조 전체의 안정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복합 균형 모형은 이러한 조정을 정태적 최적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배치되는 조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이 모형은 외교 전략을 단일한 패키지가 아니라 영역별·기능별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억제와 신뢰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동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반면,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영역에서는 위협 분산과 선택공간 관리를 위해 해징의 운용 범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별 차등 조정이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중견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범위 역시 조건부로 형성되고 재규정된다.

요컨대 복합 균형 모형은 중견국 외교를 ‘동맹 심화 vs. 해징 강화’라는 택일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정책 영역별 전략 조합의 설계와 조정이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이 산출되는 동태적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모형에서 중견국 외교의 성과는 특정 전략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제약 조건 속에서도 동맹과 해징의 결합 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해 평가된다.

Ⅲ. 미국 대전략 전환기 한국 외교 선택환경의 재편

본 장은 미국 대전략의 전환이 한미동맹의 기능적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편이 동맹의 조정 방식과 해징의 운용 범위를 어떠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재규정하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정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실제로 어떠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형성되며, 또 어떠한 영역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는지를 검토한다. 본 장의 목적은 개별 전략 선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기보다, 동일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동맹과 헤징이 어떻게 동시에 제약·재배치되며 그 누적 효과가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한국 외교의 전략적 환경은 국제정치 일반적 동학이나 특정 강대국의 정책 선호 변화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단선적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체제의 지속성, 군사적 긴장 구조, 한국 경제의 산업적 구성, 한미동맹의 제도적 진화, 국내정치의 양극화와 사회적 인식의 분절,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전지구적 권력 구조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형성된 복합적 구성체이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상 한국에게 이전보다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지들이 상호 충돌하는 압력 속에서 재배열되며 실행 가능한 정책 공간은 오히려 축소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즉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상상할 수 있는 시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선택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점차 엄격해지는 이중적 제약 속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대전략 전환기에 한미동맹의 기능과 작동 논리가 재편되는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기 한미동맹이 군사적 억제와 확장억제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전통적 군사동맹이었다면, 오늘날의 동맹은 군사 억제를 넘어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사이버 등 경제안보와 기술·산업·공급망 영역 전반에서 정렬을 요구하는 확장된 협력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단순한 지역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질서 재편의 핵심 구성원으로 재위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제도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생산 체계는 한국이 지역 중견국을 넘어 기술·산업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맹의 이러한 기능적 확장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부담을 수반한다. 동맹의 작동 범위가 군사 영역을 넘어 다영역으로 확대될수록, 한국의 정책 선택은 외교·안보의 협의한 범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조응하거나 충돌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 첨단 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중국 기업과의 협력 제한은 이러한 압력이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선택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선택적 개입과 경제안보 중심 전략은 동맹의 부담을 상호성의 이름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정교

하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제약은 한국 경제가 지닌 양면적 의존 구조와 결합되면서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미국 중심의 금융·기술 질서와 깊이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최대 교역국이자 생산기지, 소비 시장과도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뿐 아니라 완성차 및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 역시 중국과의 공급망 및 생산 네트워크에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중국 경제의 침체나 생산 과잉, 디커플링의 가속은 한국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다. 반대로 미국의 기술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적극 협력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미·중 양대 경제권의 힘과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에 이중으로 부착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의 정렬은 다른 한쪽의 반작용을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독립이나 탈동맹의 문제로 이해되기 어렵다. 한국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독자적 주권 개념과 달리, 미·중 경쟁이 전면화된 구조 속에서 정책적 재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불가피한 선택의 비용을 어느 영역에서 흡수·상쇄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문제로 재정의된다. 자율성은 선택의 폭을 무한히 확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압력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압력을 조율하는 문제에 가깝다.

2025년 NSS는 이러한 관리 과제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미국은 모든 지역·전략 공간에 대한 동시적 개입을 전제하기보다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동맹국과의 역할 분담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대전략을 조정하고 있다.²¹⁾ 미국방부와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 역시 향후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억제 효율성 제고와 부담의 합리적 분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²²⁾ 이러한 전환은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동맹의 작동 방식과 기여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조율해야 할 구조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별 전략 우선순위의 급격한 이동과 공세적 개입의 강화는 이러한 관리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미국이 서반구 우선주

21)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22) 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5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RAND Corporation. 2023. *Proxy Warfare in Strategic Competition: State Motivations and Future Trend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25. "The Axis of Upheaval: Gauging the Growing Military Cooperation Among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July 28.

의를 통해 안보 자산과 전략적 관심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특정 지역에서는 군사적·비군사적 강압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동맹국이 직면하는 압박은 전략적 ‘공백’의 발생이 아니라 기능적 기여 요구의 동시적 상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은 동맹 유지를 조건으로 요구되는 다영역 기여의 급증과 동아시아 관여의 재정의에 따른 선택 강요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이는 복합 균형 모형의 균형점을 단기간에 크게 이동시키는 충격 변수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의 전략적 공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상태가 아니라, 미국의 공세적 개입과 동맹 압박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변수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복합 균형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조정의 정밀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적 기여의 비용이 전략적 자율성의 가치, 즉 선택 공간과 정책 여지를 상회할 수 있는 임계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 이전에 조정 규칙과 제도적 완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적 경고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리·조정 필요성은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연루 가능성의 문제에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찍이 브레진스키(Brzezinski)²³⁾가 한국을 유라시아 질서를 잇는 전략적 관절부로 규정한 것은, 오늘날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 질서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온 공간이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강대국 간 세력전이의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전쟁과 외부 개입을 경험해 온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의 작동 범위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는 보다 정교한 전략적 고려를 요구받게 된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작전적 활용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역내 억제 구조 전반과 일정한 연계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²⁴⁾ 이는 한국이 특정 분쟁에 자동적으로 연루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억제 구조가 어떠한 조건과 범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구조적으

23) Brzezinski, Zbigniew. 1997.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24) 박병광. 2022.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제187호, 11월; 문계성. 2023.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접경지역통일연구』 제7집 제1호; Goldfeld, David A., et al. 2024. *Denial Without Disaster: Keeping a Taiwan Conflict from Nuclear War*,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Klingner, Bruce. 2024. “South Korea Cannot Afford to Sit Out Taiwan Contingencies”, *The Heritage Foundation*, October 30.

로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미동맹의 억제 구조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 외교의 주변적 논점이 아니라 전략적 조정의 핵심 과제로 전면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요컨대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환경은 선택지의 확대보다는,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선택의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공간이다. 한미동맹의 확장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안정의 원천인 동시에, 정렬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정책 선택의 재량을 제약하는 제도적 효과를 동반한다.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을 형성해 왔지만, 미·중 경쟁이 구조화되는 조건에서는 외교적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미국 대전략의 전환은 한국에 대한 선택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일한 전략의 채택이 아니라 전략 간 조합과 조정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환경을 형성한다. 결국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동맹의 심화와 해징의 확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선택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동맹과 해징의 결합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정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이 어떠한 조건과 범위에서 형성·유지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IV. 미국 대전략 전환과 한국 외교 전략: 전략적 자율성의 통합적 설계

앞선 장의 분석이 보여주듯, 미국 대전략의 전환은 한국 외교가 오랫동안 활용해 온 기능적 분업형 해징의 작동 조건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동맹이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다영역 전략 플랫폼으로 재구성되는 환경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위협을 관리하던 기존 접근은 더 이상 충분한 조정 여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로써 한국 외교의 과제는 특정 전략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요구와 비용을 전제로 동맹과 해징의 운용을 어떠한 원리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교하게 결합할 것인가라는 설계의 문제로 전환된다. 핵심은 동맹이나 해징 중 어느 하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전략의 조정이 누적되면서 전략적 자율성이 가능해지는 영역과 제약되는 한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대전략 전환기 한국 외교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어떠한 조정 논리와 제도적 설계를 통해 현실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정책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해징과 동맹의 결합 방식이 어떠한 전략적 조합과 작동 조건 아래에서 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 통합적 조정의 구조: 동맹 관리, 구조적 헤징, 전략적 자율성의 조건부 축적

미국 대전략 전환기 한미동맹은 기본적인 억제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해 그 작동 방식이 보다 조건화된 관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강화하는 반면, 미·중 군사 경쟁의 심화와 대만해협 긴장의 상시화는 동맹의 고려 범위를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역외 위기 관리까지 포함하도록 압박한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정 제공의 핵심 장치이자, 보다 정교한 관리와 조정이 요구되는 전략적 협력의 틀로 성격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연루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관건은 연루가 논의되는 조건과 범위를 사전에 구분하고, 그 적용 기준을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한반도 방어와 직접 연계된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에서 파생되는 역외 갈등을 구분하고, 기여 방식과 수준의 적용 조건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경우, 동맹의 신뢰 유지와 위협 관리는 상호 보완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연루의 제도화는 동맹의 작동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동맹 관리와 구조적 헤징, 그리고 그 조정의 누적으로 형성되는 전략적 자율성은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동일한 전략 환경 속에서 연계되어 작동하는 통합적 조정 구조의 구성 요소로 파악된다.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조정 여지를 확보하고, 구조적 헤징을 통해 선택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축적하는 접근은 미국 대전략 전환기 중견국 외교의 가장 안정적인 대응 경로라 할 수 있다.

경제·기술·산업·공급망·규범 영역에서 헤징 역시 근본적 재정의의 요구받고 있다. 과거의 헤징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위협을 완화하는 관리 기법이었다면, 오늘날의 헤징은 동맹이 다영역 전반으로 확장되는 국면에서 영역별 정렬 강도를 사전에 배치하는 구조 설계로 전환된다. 한국 경제가 미국 주도의 기술·금융·규범 질서와 깊이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최대 교역·생산 네트워크와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은, 어느 한 방향의 급격한 정렬은 즉각적인 비용 전이로 이어지는 비대칭 위험을 상수로 만든다. 이에 따라 한국형 헤징의 요체는 양측 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산업과 기술의 성격에 따라 정렬의 범위와 속도를 차등화하는 영역별 차등 정렬을 통해 위협의 전이 경로를 통제하는 데 있다. 전략기술 영역에서는 접근권과 표준 경쟁, 장기 산업 기반의 관점에서 선택적 정렬이 불가피하게 작동하는 반면, 범용 산업 영역에서는 생산 거점과 조달 경로의 점진적 분산을 통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정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해징은 동맹과 대립되는 선택이 아니라, 동맹의 확장된 기능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 보완 장치로 기능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이와 같은 동맹 관리와 구조적 해징의 정교한 결합을 통해 과정적으로 산출되는 결과 변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의 자유 그 자체라기보다, 불가피한 선택이 요구되는 국면에서 그 비용과 파급 경로를 얼마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깝다. 이는 단순히 동맹으로부터의 거리두기나 탈동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강제되는 조건 속에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전이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조정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견국 네트워크와 규범 역량은 전략적 자율성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한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중동·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협력은 외교 다변화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책 정렬 요구와 입장 선택의 부담이 특정 양자 관계나 단일 전략 축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구조적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양자 관계의 누적이 아니라, MIKTA와 같은 중견국 협의체는 물론, G20, APEC, ASEM과 같은 다층적 협의 플랫폼을 통해 다자적 논의와 규범 형성의 형태로 제도화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 특히 디지털 거버넌스, 기술 표준, 공급망 투명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물론, 해저 통신 케이블·전력망·반도체 생산시설·주요 항만과 물류 허브 등 핵심 인프라 보호 영역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적 참여는, 전략적 자율성을 단순한 거부의 권리가 아니라 국제 규범 형성에 참여하는 권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들 플랫폼은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강대국의 정책 압력과 요구를 집합적 의제와 규칙의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선택 비용을 분산시키고 외교적 조정 여지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네트워크와 규범 역량은 동맹이나 해징을 대체하는 전략이 아니라, 동맹과 해징의 결합이 특정 방향으로 경직되는 것을 완충·조율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공하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국 대전략 전환 하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은 단일한 정렬 논리로 환원될 수 없으며, 안보,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외교·규범 영역별로 상이한 조정 원리와 조정 속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영역별 차등 조정의 구조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미국 대전략 전환기 한국 외교의 영역별 차등 조정 구조

구분	안보 영역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영역	외교·규범 영역
핵심 전략	동맹 중심 안정 관리	구조적 헤징	중견국 네트워크 기반 규범 역량
작동 원리	조건부 연루의 제도적 관리	영역별 차등 정렬	다자 협의체를 통한 규범 조정
주요 목표	억제 유지 및 위기 안정성 확보	위험 전이 및 충격 완화	선택 공간의 제도적 완충
정렬 강도	높음(확장억제·작전협력)	중간(핵심기술·표준)	낮음(다자규범·의제설정)
조정 속도	위기 대응 중심으로 빠름	차등적·선별적	장기적
주요 위협	역외 연루의 확대 가능성	신뢰 비용 및 공급망 충격	실효성의 지연

주: ‘정렬 강도’는 각 정책 영역에서 요구되는 미국 전략과의 구조적 부합 수준을, ‘조정 속도’는 정렬 변화에 수반되는 시간적 압박과 정책 조정 여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표는 영역별로 상이하게 작동하는 조정 논리를 비교·구조화하기 위한 분석적 도식이다.

2. 복합 균형 모형의 작동 논리: 통합적 조정과 제도화 과제

앞선 논의가 보여주듯, 미국 대전략 전환 하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동맹과 헤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동맹과 헤징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동일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상호 연동되며, 그 결합과 조정의 방식에 따라 전략적 자율성이 파생적으로 산출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 외교의 성과는 특정 전략의 일관된 선택 여부가 아니라, 동맹과 헤징의 결합을 제도적 원리와 규칙에 따라 정교하게 조정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적 역량에 의해 평가된다.

복합 균형 모형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대전략 전환이 동맹국에게 고정된 목표 상태나 안정적인 최종 균형점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NSS가 강조하는 선택과 우선순위의 전략관, 경제안보의 중심화, 그리고 부담 분담 네트워크의 제도화는 동맹을 자동적인 군사 보증 장치가 아니라, 기능별 정렬과 기여를 둘러싼 지속적 조정의 구조로 재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동맹은 단기적으로는 안보 안정과 접근권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정렬 범위와 기여 방식이 조정되지 않은 채 누적될 경우 연루 비용과 경로의존성을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헤징 역시 불확실한 전략 환경에서 위험 분산과 옵션 가치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수단이지만, 그 운용 강도가 동맹의 제도적 신뢰 관리 역량을 초과할 경우 안정 장치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비용을 누

적시키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전략적 자율성은 이 두 수단의 대립적 대안이 아니라, 동맹의 정렬 강도와 헤징의 조정 폭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관리되는가에 따라 확대되거나 제약되는 과정적 성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복합 균형 모형의 핵심은 동맹 또는 헤징의 극대화가 아니라, 동맹의 안정 기능이 과도한 연루 압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관리하고 헤징의 조정 폭이 신뢰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양자의 결합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조건을 설계·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외교 전략을 단일한 노선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상이한 비용과 접근권, 안정성과 선택 여지를 어떻게 교환하고 조합할 것인가라는 정책 설계의 문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복합 균형 모형은 시간 차원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재정 제약과 대전략 전환은 장기적 구조 변수인 반면, 특정 행정부의 정책 기조나 역내 위기 국면은 중·단기적 변동 변수에 가깝다. 이들을 동일한 시간 척도에서 관리할 경우, 단기적 안보 안정의 추구가 장기적 선택 공간의 잠식으로 전이될 위험이 커진다. 이 모형은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여, 단기적 안정 확보와 중장기적 자율성 축적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는 조정 논리를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영역별 차등 조정 역시 복합 균형 모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안보 영역에서는 동맹의 억제 기능이 안정 장치로 우선 작동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경제·기술·산업·공급망 및 외교·규범 영역 전반에서 동일한 수준의 정렬을 자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영역에서는 산업과 기술의 성격에 따라 정렬의 강도와 범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적 헤징이 가능하며, 외교·규범 영역에서도 중견국 네트워크와 다자 제도를 통해 강대국의 정책 정렬 압력이 단일한 경로로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별 차등 조정은 외견상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복합 경쟁 질서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에 가깝다.

복합 균형 모형의 성패는 이러한 조정 논리가 제도화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동맹 내 연루의 경계 설정, 경제안보 영역에서의 정렬 기준, 중견국 네트워크에서의 역할 규정이 임시적 판단이나 비공식적 대응에 머무를 경우, 조정은 위기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러한 요소들이 전략 문서, 상설 협의체, 그리고 반복적 정책 관행을 통해 축적·내재화될 경우, 한국 외교는 외부 압력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과 원칙에 기반한 구조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확장 억제 협의체, 공급망 협의 메커니즘, 중견국 다자 협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협력 수단이 아니라, 동맹과 헤징의 결합 방식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의 축적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제도 장치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전략 전환기 한국 외교의 합리적 목표는 안정적인 균형점의 ‘발견’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복합 균형 모형을 지속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전략적 자율성은 이러한 지속적인 조정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산출되는 성과이며, 바로 이 점에서 한국 외교의 성과는 동맹과 헤징 중 특정 전략을 선행적으로 선택하는가가 아니라, 이들 전략 간 조정의 정밀성과 그 조정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국 대전략의 전환이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분석틀로서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 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2025년 NSS는 선택과 우선순위 조정, 경제안보의 중심화, 부담 분담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통해 동맹의 작동 논리를 재정 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 변화가 아니라 동맹을 자동적 군사 보증에서 분야별 정렬과 기여를 중심으로 한 조정 구조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변화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 외교에 특정 전략을 단선적으로 선택하는 접근이 아니라, 다영역에서 상이한 요구와 비용을 체계적으로 조합·조정하는 정교한 전략 설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동맹과 헤징을 상호 배타적 대안이나 병렬적 선택 지로 취급해 온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들이 동일한 구조적 제약 아래에서 동시에 조정·운용되며 상호 효과를 증폭하거나 상쇄하는 전략적 구성 요소로 작동함을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선행적으로 설정되는 목표가 아니라, 동맹과 헤징 간 조정과 결합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조건부로 형성·확장되는 성과로 재정의된다. 따라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동맹 심화나 헤징 강화라는 단선적 노선 선택이 아니라, 군사·경제·기술·산업·공급망·규범 영역 전반에서 상충하는 요구와 비용을 고려하며 동맹과 헤징의 결합을 어떠한 원리로 설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규칙과 정책 역량을 구축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중견국 외교의 합리성을 단일 전략 축 위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상이한 전략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조정되는 다차원적 과정으로 포착한다는 데 있다. 동맹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안정성과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정렬 범위와 기여

방식이 조정되지 않은 채 누적될 경우 전략적 선택 공간을 경직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반대로 해징의 확대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옵션을 보존하는 합리적 대응이 될 수 있지만, 그 운용 강도가 동맹 신뢰 관리 역량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정치·외교적 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전략적 자율성은 이 두 전략의 대립적 결과가 아니라, 정렬의 강도와 조정 폭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관리되는가에 따라 확대되거나 제약되는 과정적·관계적 속성이다.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정책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동맹이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기술·산업·공급망 질서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의 기능 분업형 해징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본 연구는 안보 영역에서는 조건부 연루의 제도화를 통해 동맹의 안정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기술·산업·공급망 영역에서는 영역별 정렬에 기반한 구조적 해징을, 외교·규범 영역에서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통한 완충 능력의 축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단일한 최적 상태를 고정하는 전략이 아니라, 영역별·시간별 비대칭 조정을 통해 단기적 위기관리와 장기적 구조조정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는 과정적 설계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한국 외교의 지속 가능성이 결속의 수사나 입장 표명의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여와 정렬의 범위를 사전에 조율·규칙화하고 이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안보 경쟁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해징은 더 이상 모호한 중립의 표현이 아니라, 영역별로 정렬의 강도와 속도를 배치함으로써 위험 전이의 경로를 관리하는 전략적 설계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과의 거리 설정을 선언함으로써 확보되는 상태가 아니라, 동맹의 다영역 정렬에 수반되는 기능적 기여의 비용이 선택공간과 정책 여지를 잠식할 수 있는 임계점을 관리하면서, 동맹 관리와 구조적 해징을 정교하게 결합·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건부로 축적되는 성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의는 미국의 2025년 NSS와 주요 전략 문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전략 전환의 공식적 인식과 방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 정책 운용은 미국 국내 정치, 의회 역학, 산업 이해관계, 그리고 동맹국의 대응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가변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복합 균형 모형은 조정의 논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개별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를 단일한 규칙으로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는 영역별 비용과 편익, 위기 시나리오별 연루 경로와 경제적 충격 전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작동 조건을 실증적으로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국내 정치적 분절과 사회적 인식, 산업 이해관계가 외교 전략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후속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복합 균형 모형은 미국 대전략 전환기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분석 언어를 제공한다. 한국은 강대국 경쟁의 구조적 압력 속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전략 조합의 정밀성과 제도화 역량에 따라 자신의 선택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중견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동맹과 헤징의 조정·운용 과정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어떻게 형성·축적되는지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복합 경쟁의 시대에 한국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준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김소연. 2024. “비동맹국가 헤징전략의 지속가능성 탐색: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2집 제2호.
- 김우상. 2023.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신아세아』, 제30권 제2호.
- 나승학. 2015.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제3호.
- 류인석. 2024.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이중역세 역할”, 『국방연구』, 제67권 제4호.
- 마상윤. 2022.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115-152.
- 문계성. 2023.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접경지역통일연구』 제7집 제1호.
- 박기태. 202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국가전략』, 제31권 제3호.
- 박병광. 2022.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제187호, 11월.
- 박인휘. 2023. “신국제질서의 등장과 한국 외교: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30권 제4호.
- 반길주. 2021. “회피-수용-주도 진화전략: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도전과제와 중견국 맞춤형 외교안보전략”,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 유상범. 2023.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과 한미동맹에의 함의”, 『국제정치연구』, 제26권 제3호.
- 이성현. 2024.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외교: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 『계간 외교』, 제10권 제151호.
- 이재승. 2025.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8권 제3호.
- 장희경. 2023. “미·중 경쟁 시대 독일의 지정학적 헤징 전략: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 『국제관계연

- 구』, 제28권 제2호.
- 정향석. 2013.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평화연구』, 제21권 제2호.
- 조비연. 2024. “한미동맹의 변화와 발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5권 제2호.
- Brzezinski, Zbigniew. 1997.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 Giorciari, John D. 2010. *The Limits of Alignment: Southeast Asia and the Great Powers since 1975*,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25. “The Axis of Upheaval: Gauging the Growing Military Cooperation Among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July 28.
- Goh, Evelyn. 2005. *Great Powers and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Omnibus or Flexible Engagement?* London: Palgrave Macmillan.
- Goh, Evelyn. 2006.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August 31.
- Goldfeld, David A., et al. 2024. *Denial Without Disaster: Keeping a Taiwan Conflict from Nuclear War*,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Ikenberry, G. John. 2016.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31, no.1.
- Jones, David Martin and Nicole Jenne. 2021. “Hedging and Grand Strategy in Southeast A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2, no.2.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lingner, Bruce. 2024. “South Korea Cannot Afford to Sit Out Taiwan Contingencies”, *The Heritage Foundation*, October 30.
- Kuik, Cheng-Chwee. 2008. “The Essence of Hedg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30, no.2.
- Kuik, Cheng-Chwee. 2016. “How Do Weaker States Hedge? Unpacking ASEAN States’ Alignment Behavior toward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25, no.100.
- Lee, Terence. 2024.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Hedging in Singapore’s Foreign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46, no.1.
- Marston, Hunter S. 2024. “Navigating Great Power Competition: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Strategic Rival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4, no.1.
- RAND Corporation. 2023. *Proxy Warfare in Strategic Competition: State Motivations and Future Trend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Roy, Denny.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7, no.2.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
- Tan, Wayne and Jenn-Jaw Soong. 2023. “The Political Economy of India and Its Strategic Choice under U.S.-China Power Rivalry and Hegemonic Competition: A Defensive Hedging Policy”, *The Chinese Economy*, Vol.56, no.4.
- The White House.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5 National Defense*

- Strategy*,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 Thomas. 2023. “Middle Power Hedging in the Era of Security/Economic Disconnec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3, no.1.
- Zehfuss, Maja. 2002.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olitics of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South Korea's Foreign Policy Choices amid the Transition in U.S. Grand Strategy: A Composite Equilibrium Model of Strategic Autonomy

Park, YongSoo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ngoing transition in U.S. grand strategy is reshaping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 environment and proposes a Composite Equilibrium Model of Strategic Autonomy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address this shift. The 2025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conceptualizes strategy as a process of prioritization rather than linear choice, transforming alliances from automatic military guarantees into contract-based arrangements centered on functional alignment and differentiated contributions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security and burden-sharing networks. This transformation renders linear logics of alliance deepening versus hedging increasingly inadequate and instead raises the question of how strategic autonomy can be formed and managed through the calibrated adjustment and combination of alliance and hedging. While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alliances, hedging, and strategic autonomy separately, they have not sufficiently explained how these elements are jointly adjusted within the same constraint environment as alliances evolve into multi-domain strategic platform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alliance and hedging as interdependent, policy-managed variables and defines strategic autonomy as a process-based outcome that accumulates over time through their calibrated interaction under structural constraints. By doing so, it reframes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mid U.S. grand strategy transition not as a matter of strategic selection but of continuous adjustment and management.

Key Words : U.S. grand strategy, ROK-U.S. alliance, hedging strategy, hedging-alliance adjustment, strategic autonomy

• 논문투고일 : 2026년 1월 06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6년 2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08일